

「농수산물 품질 인증제도 통합 방안」 중간보고회 결과 보고

'25. 12. 10(화). 농수산물팀

□ 회의개요

- 일시/장소 : '25. 12. 5.(금), 14:00 ~ 16:00 / 대회의실(대면)
- 참석자 : 위원장님, 자문·관계부처, 용역기관, 사무국 등 19명
 - ▶ 자문위원 : 이계임 선임연구원(Krei), 김영목 교수(부경대), 심화섭 수출처장(aT), 조정찬 대표(입법Q&A), 이주형 전문위원(법무법인 비트)
 - ▶ 관계부처 : 정준구 사무관(농식품), 박재풍·박주태·전윙희 사무관, 이희성 주무관(농관원), 이영훈 사무관, 장희영·정지원 주무관(해수부), 박창현 주무관(수품원)
 - ▶ 용역기관 : 해양수산과학기술연구조합 김명호 박사
 - ▶ 사 무 국 : 위원장님, 농수산물팀장, 사무관, 전문관
- 목적 : 연구용역 중간보고에 따른 의견수렴 등 자문회의

□ 주요내용

관계부처

- 친환경 인증제도는 복잡한 이해관계로 부처내 담당자, 관련단체 등 의견을 폭넓게 수렴 단계 필요(정준구 친환경농업과)
- 원산지인증은 전통식품 인증과의 상당 부분 겹치는 만큼 제도 정비 과정에서 통합해 운영 효율성 제고 필요(박재풍 농산물품질관리원)
- 통합 필요성과 목적이 명확해야 되며 단순한 법·기관 통합이 아니라 소비자 혼란 줄이는 방향으로 체계 개편 필요(박주태 농산물품질관리원)
- 축산 무항생제 인증 분리로 인증제도 통합시 법체계 혼선 해소 및 인증기관 업무범위 조정도 함께 검토 필요(이희성 농산물품질관리원)
- 소비자 혼란의 핵심인 표시체계 정비가 필요하며 GAP·HACCP 명칭 통합은 부처간 협의 필요(전윙희 농산물품질관리원)

- 수산물 인증은 저조해 인증기관 운영 곤란, 법·기준 일원화와 독립적 인정원 설치 필요성 공감, 현장 의견 반영 필요(이영훈 수출가공진흥과)
- 제도 통합이나 명칭 정비 과정에서 양식뿐만 아니라 수출 HACCP도 포함해 국제기준과의 정합성 고려 필요(장희영 수산물안전기획과)
- 해수부 소관 인증제도는 민간 주도 운영을 기본 방향으로 기존 민간 인증기관 관리 감독 기능 강화 필요(정지원 양식산업과)
- 전통식품과 품질인증은 목적과 기준이 상이하므로 인증제도 통합시 행정절차 차이를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 필요(박창현 수산물품질관리원)

자문위원

- 우선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정비 필요성에 대해 관계부처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 및 인정원(조직)은 신중한 검토 필요(이계임 위원)
- 인증제도 난립으로 소비자 혼선이 크므로 불필요한 인증 통폐합되 수출 경쟁력에 필요한 인증은 국제적 동등성 필요(김영목 위원)
- 인증제도 개편시 특히 수출 관련하여 행정절차 간소화로 수요자 부담 경감 등 행정 비효율성 개선 검토 필요(심화섭 위원)
- 기관(조직) 통폐합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므로 산재한 인증제도 집대성과 소비자 이해 도모를 위해 정의 조항 정비가 우선 필요(조정찬 위원)
- 해외사례 대비 인증 과도하므로 인증 중심 정책에서 관리 기준 및 사후 감독을 강화하는 체계로 전환 필요(이주형 위원)

사무국·용역기관

- ▶ 연구과제의 목적은 인증제도 통합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인증 관련 규정을 집대성 하는 것임을 설명(제22차 본회의, 24.9.25)
 - 과거 통합 추진이 업계 반발로 중단 사례 → 단기간 내 제도 통합보다 우선 인증제도 현황 체계화 정비 필요(집대성)

▶ 의견에 대한 설명 및 방향(용역기관)

- (부처·민간 우려) 제도 집대성은 행정·수요자 모두 편익 제고
- (인증기관 혼선) 지정·평가는 독립기구(인정원), 사후관리는 현행 유지
- (인정원) 필요성 검토 차원 → 공정성을 위해 인증기관 지정·평가
- (축산 무항생제) 집대성해도 기준은 분야별 운영 가능
- (원산지 인증) 전통식품 인증 등 중복·유사 인증은 통폐합 필요
- (GAP·HACCP) 다만 한글명칭(예, 안전관리) 통일, 국제규범 기준 유지
- (수출 HACCP) 통합원칙이며 수출규정은 현행 유지
- (부처의견 수렴) 부처 실무자와의 소통으로 애로사항 추가 파악

□ 향후계획

- 연구용역 기간 연장 검토(요청시) : 현행 '25. 7. 10. ~ '26.1.5.(180일)
- 최종보고(자문포함) → 농수산물식품분과 보고 및 본회의 의제 검토('26.상반기)
- 참석수당 지급 : 자문위원 1인당 20만원 * 관계부처 공무원 미지급

